

##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찰학(총평)

### ■ 분야별 출제 구분 ■

구 분	출제문항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항(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한국경찰/외국경찰	2문항(13번, 14번)	
경찰행정법	기초이론	1문항(15번)
	경찰조직법	1문항(16번)
	경찰공무원법	×
	경찰작용법	8문항(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26번, 28번)
	경찰구제법	3문항(21번, 25번, 27번)
경찰행정학	6문항(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	1문항(36번)
	수 사	2문항(35번, 37번)
	경 비	×
	교 통	1문항(40번)
	공공안녕정보	1문항(39번)
	안보수사	×
	외 사	1문항(38번)

### ■ 전체 총평 ■ (난이도 中)

- ① 전반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짧았으며,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다.
- ② 다만,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 및 강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번 정보수집 문제는 가장 지엽적인 조문 문제였다(단어 하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말 치사한 문제). 21번 행정응원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였다(상식적으로는 소거 가능). 또한 35번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문제는 거의 4~5년만에 출제되었다(평상시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음)
- ③ 92.5점 이상은 “합격 유력·확실권”, 85점 이상은 “합격 기대권”이라고 판단된다.

### ■ 대표적인 특징 ■

- ① 경찰조직법에서 1문제 출제된 것, 경찰공무원법에서 0문제가 출제된 것은 매우 놀랍다.
- ② 전통적으로 항상 출제되었던 경비경찰이 0문제 출제된 점, 교통경찰에서 판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점, 공공안녕정보경찰에서 집시법이 출제되지 않은 점은 매우 놀랍다.
- ③ 서진호 강사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9급 시험의 일반행정법과 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평소 행정기본법과 행정행위의 종류 정도만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행정행위의 효력·하자·치유 등 이론 및 판례는 공부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 ④ 그 결과 행정기본법 문제가 약 3문제 정도 출제된 것은 향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 ■ 향후 공부방법론 ■

- ① 동일하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집중 공부·회독하는 것이 핵심이다.
- ②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조직/공무원/작용/구제에 관한 법이다. 부디 9급 공무원시험의 일반행정법 처럼 공부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 ③ 100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까지 지나치게 확대 공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찰학(해설편)

**【정답표】**

문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②	④	①	④	③	③	③	②	①	③	②	④	②	③	②	④	③	③	①	②
문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③	④	①	④	①	④	②	③	④	①	③	①	④	④	②	③	③	②	③	④

**【문제 01】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주민자치권에 기초하여 경찰의 역할을 문제해결자로서 본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중점을 두며,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기초하여 경찰의 역할을 범죄진압자로 본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며,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이다.

**【문제 0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은 고등경찰, ㉡은 보통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사회적 가치·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유래**하였다. 『고등경찰』은 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을 감시 및 단속하는 **정치경찰**을 의미한다. 『보통경찰』은 경찰기관의 내부적으로 직무의 분배에 의하여 경찰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 0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경찰의 업무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 04】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1945년 미군정시대에는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경찰의 임무는 제국주의적 치안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표어로 정하고, 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그 표어 마크를 제복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문제 05】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는 ㉠ 적절한 도덕적 동기, ㉡ 위반사항의 중대성 및 급박성, ㉢ 합리적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 확신, ㉣ 성공가능성, ㉤ 최후 수단성(보충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문제 06】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사례금을 받더라도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단서).

【문제 07】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고위공직자』란 경찰공무원의 경우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3호 아목). 따라서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문제 08】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학습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 09】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베카리아(1764)와 벤담(1789)은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역설하였다.

내 용	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한다(의사비결정론). ② 범죄는 일을 덜 하고도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매력이 있어 범죄를 선택하기 쉽다(객관주의). ③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일반예방주의). ④ 형벌은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해야 한다.
특 징	범죄를 발생시킨 외생변수는 무시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범죄원인을 분석하므로 일반 예방주의, 의사비결정론, 객관주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영 향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예방이론 중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 10】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일반예방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예방이론』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자의 가해행위를 유발시킨 피해자의 경우로서,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 멘델손(Mendelsoh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

구 분	피해자의 개념	내 용(예시)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순수한 피해자(무자각)	①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② 유아나 아동유괴에 있어서의 유괴당한 아동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무지에 의하여 책임이 적은 피해자	인공유산을 시도하다 사망한 임산부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자발적인 피해자	①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② 자살미수 피해자 ③ 동반자살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자의 가해행위를 유발시킨 피해자	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②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가해 책임이 높은 피해자	타인을 공격하다 반격을 당한 피해자	① 정당방위의 상대자인 공격적 피해자 ② 무고죄의 범인 같은 기만적 피해자

**【문제 1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내용이다.

**【문제 13】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1945년 10월 경무국이 설치된 후에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예비검속법」 등이 폐지되었고, 1948년 4월에는 「보안법」이 폐지되었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영국은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으로 구성되는 『4원 체제』로 운영된다.**

지역치안위원장	①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지역치안계획을 수립 ② 지방경찰청장·차장의 임면권을 행사(내무부장관의 의견제시) ③ 예산 및 재정을 총괄
지역치안평의회	① 지역치안위원장의 견제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선출직 대표와 독립위원으로 구성 ② 경찰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③ 경찰예산안 및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④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와 출석요구권 ⑤ 지역치안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지방경찰청장	① 관할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운영 ② 차장 이외의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내무부장관	① 내무부 지원예산 50%에 대한 감사 ② 국가적 범죄대응에 관련하여 지역경찰에 대한 임무부여 및 조정 ③ 지역치안위원장의 지방경찰청장·차장의 임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제시

**【문제 15】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 행정안전부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문제 17】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제지』란 목적의 범위를 범하려고 하는 자 또는 범죄행위를 실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력에 의한 행위를 통해 강제적 중지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즉,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19】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이번 시험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임)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공공질서 ×)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문제 20】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문제 21】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

**【문제 2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문제 2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문제 24】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3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문제 25】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국가배상법」상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란 단순히 법률과 법규명령에 위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널리 성문법과 불문법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일반원칙인 인권존중·권력남용의 금지·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도 법령의 범위에 모두 포함된다.

【문제 26】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문제 27】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문제 2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력은 『중위험 물리력』에 해당한다. 즉,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문제 29】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편성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분업화의 원리)에 해당한다.

- ① (×) 구조조정 **의 원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② (×) 업무에 대한 신속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단일한 명령계통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은 『계층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30】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 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경찰청장이 정하는 ×)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문제 31】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 ㉡, ㉢은 옳은 설명이며, ㉣은 틀린 설명이다.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본문).

-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찰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경징계의결 요구 또는 경징계 처분 중인 자
-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 ㉢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 ㉣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 ㉤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 ㉥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문제 32】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호지역은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

②, ③, ④ (×) **무기고 및 탄약고, 종합상황실, 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에 해당한다.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통제구역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암호취급소</li><li>② 정보보안기록실</li><li>③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li><li>④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li><li>⑤ 암호장비관리실</li><li>⑥ 정보상황실</li><li>⑦ 비밀발간실</li><li>⑧ 종합조회처리실</li></ul>
----------	---

**【문제 3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은 크랜돈(G. Crandon), ㉡은 에릭슨(R. Ericson), ㉢은 로버트 마크(R. Mark)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34】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직위분류제**』란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지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류하는 공직분류방식이다. 직위분류제는 **임용·보수 및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수단으로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서,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즉,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문제 35】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

**【문제 36】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 ㉡, ㉢은 옳은 설명이며, ㉣은 틀린 설명이다.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의 유무**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b>강간·강제추행 등</b> ② <b>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b> ③ 아동·청소년 <b>매매행위</b>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b>강요행위 등</b>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	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강간 등 <b>상해·치상</b> ④ 강간 등 <b>살인·치사</b> ⑤ <b>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b> 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⑦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b>알선영업행위</b> ⑧ 아동·청소년에 대한 <b>성착취 목적 대화 등</b> ⑨ 아동·청소년 <b>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하는 행위</b>

**【문제 37】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며, ③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 丙과 그 사촌동생은 동거하는 있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하였으나,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약취·유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인질강요, 중손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등
-----	---

**【문제 38】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과 ㉡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과 ㉣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참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제 39】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정보배포의 원칙 중 『적시성의 원칙』이란, 보안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40】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해당하며, ④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